

현대차, 100개 이상 신차 투입... 2030년 영업이익율 9% 목표

2026 CEO 인베스터 데이

본업 경쟁력 기반 기업가치 제고
로보틱스 등 미래사업 경쟁력 강화
무노스 사장 “피지컬 AI 기업 도약”

현대자동차가 완성차본업 경쟁력과 미래차 기술력 강화를 통해 2030년 영업이익율 목표를 기존 8%에서 9% 이상으로 높였다. 글로벌 판매목표는 555만대를 유지하면서 영업이익을 늘려 기업의 가치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26일 현대차는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6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장기 전략과 재무계획을 발표했다. 호세 무노스 대표이사(CEO·사장), 박민우 AVP본부장(사장) 겸 포터투닷 대표이사, 김창환 전동화에너지솔루션담당(부사장), 이승조 재경본부장



호세 무노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26일 서울 글래드호텔서울에서 열린 ‘2026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장기 사업 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CFO·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는 2030년 글로벌 판매대수 555만대, xEV 판매비중 60% 달성이라는 기존 중장기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환경은 불안정하지만 완성

차 본업 경쟁력이 견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올해 상반기 하이브리드차(HEV) 판매는 36만3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고, 매출(95조2000억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완성차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제네시스의 첫 하이브리드차(HEV) ‘GV80 하이브리드’를 국내와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 내년 상반기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를 현대차·제네시스에서 출시할 방침이다. 누적 판매 1000만대를 달성한 현대차의 베스트 셀링카 투싼과 투싼 하이브리드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100개 이상의 신차를 투입하고 생산능력을 127만대 확대하는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가동한다. 하이브리드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를 앞세워 전동화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미래사업 경쟁력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100개 이상의 완전·부분변경 및 파생모델을 출시한다. 이 가운데 18개 이상은 기존에 없던 신규 차급의 완전 신차다.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도 글로벌 확장에 속도를 낸다. GV90과 GV80 하이브리드, EREV SUV, 고성능 GV60 마그마 등을 앞세워 전동화와 고성능 라인업을 강화하고, 유럽을 비롯해 인도와 아세안으로 시장을 넓힌다. 2030년에는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35만대 판매가 목표다.

현대차는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

량 데이터 수집부터 AI 학습, 서비스 개선, 무선소프트웨어업데이트(OTA)로 이어지는 ‘데이터 플라이휠’을 구축한다. 2028년 첫 SDV 양산차에 자율주행 레벨2+를 적용하고, 이후 레벨4까지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9년에는 100MW급 새만금 AI 데이터센터를 가동해 5만장 이상의 GPU를 수용할 계획이다.

배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능과 가격, 안전을 동시에 겨냥한다. 자체 개발 셀과 미드니켈 NCM 배터리를 확대하고, 클라우드 기반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열전이 방지 기술을 통해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인다. 수익성 목표도 상향했다. 현대차는 2030년 연결 영업이익률을 9%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매출원가율을 기존 계획보다 3%포인트 낮출 방침이다.

호세 무노스 사장은 “현대차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며 “더 많은 모델을 출시하고, 더 많은 파워트레인 선택지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신규 차급과 신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래 신기술을 발전시키고, 로봇과 로보택시를 생산·배치하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산업용 전기료 지역별 차등 영·호남 등 최대 10% 인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연내 도입
전력자급률·균형 성장요소 등 반영

수도권에 쏠린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호남 등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연내 도입된다. 전력이 풍부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에 따르면, 현재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앞으로는 지역별 전력 수급과 수요 불균형을 반영해 조정된다. 수도권에서 가장 먼 영호남의 경우 현재 전기요금보다 최대 10% 인하될 전망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산지소(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방에서 소비)’와 ‘균형성장’이다. 기존 전기요금 체계(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별 요금을 다르게 적용한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51%, 2025년 기준 28만 221GWh)을 차지해 전력수요 분산 효과가 큰 산업용 전력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전국을 송전 혼잡 및 전력 흐름에 따른 4개 광역권과 지방우대지수 등을 반영한 4개 권역을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

로 세분화했다. 단, 제주도는 도서 지역 및 전력 수급 특수성을 감안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각 지역 요금은 ▲전력자급률(0~8원/kWh) ▲행안부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한 균형성장 요소(0~6원/kWh) ▲송전비용(0~5원/kWh)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산정 결과 현행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kWh당 181.9원)를 기준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밀집된 남부권(경상·전라)은 kWh당 13~18원이 깎여 최대 10% 수준의 인하 혜택을 받는다. 중부권(강원·충청)은 10~15원, 수도권 북부(인천·경기 북부)는 6~10원 수준으로 인하된다. 반면 전력 수요가 밀집된 수도권 남부(서울·경기 남부)는 현행 요금이 유지되거나 0~1원 수준의 미세 조정에 그친다.

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 수렴 의견과 조만간 발표될 행안부 지방우대지수를 합산해 세부안을 확정하고 연내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한 기후부 장관은 “지난 4월 추진한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이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KB금융그룹 | 국민과 함께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일상이 잠시 멈춰도 KB손해보험과 다시 출발

속상한 일이 생겨도 이상한 일이 생겨도
일상은, 멈춰선 안되지

당신에게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일상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KB손해보험이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일상을 지키는 힘 | KB손해보험]